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범정치권 ‘한마음’

전북자치도·남원시·영호남 여야 국회의원 등
“남원이 최적지... 국가균형발전 이정표” 한목소리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한 범정치권 연대가 본격화됐다.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는 2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설립을 지지하는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부지 공모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 협력 의지를 밝히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등을 비롯해 전북 지역 및 영호남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남원시장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특히 민간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과 임원진도 함께해 일선 현장 경찰관들의 남원 입지 선정 지지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남원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는 단순한 지역 생존의 문제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돼 왔으며,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남원시는 인구 8만 명(8월 기준 7만 4,867명) 선까지 무너져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가 지방 소멸 위기의 위기 돌과 기회로 평가받는다. 제2중앙경찰학교가 남원에 들어서면 연간 5,000명의 신입 경찰이 교육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약 3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00여명의 상주 인력 유입으로 인한 인구 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시는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을 위한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후보지인 구 가죽유전자원시험장은 100% 국공유지로 토지 매입비가 전혀 들지 않아 정부의 건축재정 기조와 부합한다. 광주~대구, 순천~원주 고속도로와 KTX·SRT 등 교통 인프라도 구축돼 있으며, 2030년 개통 예정인 달빛철도가 완공되면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설립을 지지하는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제2중앙경찰학교 비용·편익 분석 용역을 실시했으며, 11~12월 중 2차 평가와 부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2027년 예산 확보, 2028~2029년 기본·실시설계 이후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와 남원시는 후보지 최종 결정 시까지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 유치에 힘을 실어주는 도내 국회의원들과 전북 연고 의원들, 그리고 여야를 아우르는 영호남 국회의원, 특히 현장 경찰관들의 뜻을 대변하는 전국경찰직장협의

회까지 함께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충청권은 이미 중앙부처와 대기업이 집중돼 개발이 활발한 상황”이라며 “수도권과 충청권에 편중된 개발을 남원으로 분산시켜야만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남원=김기두 기자

민주 이성운 의원, 계절근로제
운용 효율화 국회토론회 개최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가 최근 4년 만에 33배 이상 급증하며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동시에 불법체류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을)은 지난 24일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계절근로제 운용 효율화와 전문성 강화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이 맡아야 할 구체적인 기능과 현장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발제를 맡은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의 순환보직과 인력 부족으로 현장 대응이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이 구조화되어 불법정계와 인권침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전문기관이 해외 모집과 분쟁 조정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강진우 한국이민재단 차장도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려면 전문기관이 해외 모집 단계부터 개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노서립 법무법인 ‘길’ 노무사는 “계절근로자의 21%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다국어 표준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 윤준병 의원, 2025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5일 국회의원회에서 열린 ‘제13회 2025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36년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 개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윤 의원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농어촌유학’ 관련 법안 통과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또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지방 재정 우선 고려 법안 발의 등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발전을 견인하는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역구인 정읍·고창 37개 읍면동을 매주 토요일 순회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 중심형’ 브랜드 ‘토방청담(土房淸談)’을 꾸준히 이어가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도의회 첨단전략산업 특위
바이오 산업 선진지 벤치마킹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자치도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구)는 25일 충북 청주 오송읍·오창읍 일원의 바이오 및 배터리산업 기관·기업을 찾아 벤치마킹했다. 먼저, 2012년에 설립된 이후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기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충북 바이오산업융합원을 방문해 오송 글로벌 바이오밸리 내 인프라 및 기업지원 현황 등을 청취한 후 시설을 둘러보고 관련 기업을 방문했다. 이어 지난 4월에 문을 연 충북배터리산업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시설 현황 및 주변 기업 현황 등을 청취한 후 시설 내 구축된 장비 및 현장을 둘러봤다. /이만호 기자

“분단의 길에서 평화의 길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발자취 따라

27일, 10·4 남북정상선언 18주년 기념행사-2025 한반도 평화주간 폐막식

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을 넘어 평화의 길을 열었던 故 노무현 대통령의 열의를 기억하고 한반도 평화의 미래를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가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열린다. 사업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이사장 차성수)은 오는 27일, 김대중재단, 포럼 사의재, 한반도평화포럼, 통일부와 공동으로 ‘10.4 남북정상선언 18주년 기념행사 및 2025 한반도평화주간 폐막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마련되는 첫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어가며 “제가 다녀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되고, 점차 급단의 선이 무너질 것”이라던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시민과 함께 다시 걷는 데 있다.

이날 시민 450여 명은 임진강역에서 출발해 통일대교를 넘어 도라전망대와 남북출입사무소, 도라산역을 차례로 둘러보는 ‘평화로 걷다’ 행사에 참여하며 분단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오후 4시부터는 남북출입사무소 앞에 위치한 개성으로 가는 차량게이트에서 10.4 남북정상선언 18주년 기념식 및 2025 한반도평화주간 폐막식이 진행된다. /이만호 기자

‘시장이 직접 질문에 답하다’... 정책 공감대 형성

익산시, 타운홀미팅 개최
수변도시·코스트코 등
주요 현안 질의에 답변



25일 오후 익산시청 신청사 1층 로비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이 열린 가운데, 정현을 시장이 시민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이 시민들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며 투명한 시장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정 시장은 25일 오후 시청 신청사 1층 로비에서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시정 현안에 대해 시장이 직접 설명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아파트 공급 △수변도시 조성 △코스트코 입점 △계약비리 대응 등 최근 지역사회에서 화자되는 사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고, 정현을 시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들어 진솔하게 답변했다. 우선 정 시장은 아파트 공급 정책에 대해 “그동안 공급이 부족했던 익산에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주택 수요를 충족시켰다”며 “그로 인해 인구감소 둔화, 가구 수 증가, 출산을 상생 등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아파트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며, 부층4지구 데시앙 아파트의 전세대 분양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미분양 우려에 대한 오해를 해소했다.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사업의 행정절차만 시가 지원하고, 위험부담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라며 “시가 재정적 손실을 떠안을 일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이 사업은 새민금 배후도시조성과 공공기관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권 최초로 추진되는 코스트코 익산 입점에 대해서는 “최근 있었던 익산시와 코스트코 간의 업무협약은 전국 최초의 상생협약 사례”라며 “지난 100여 명의 경제 파급효과와 2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시민들의 기대를 높였다. 최근 발생한 계약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정 시장은 솔직한 심정을 내비쳤다. 정 시장은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수사 결과와 자체 감사 결과로는 개인의 일탈로 파악

된다”며 구속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수의계약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리에 연루된 업체는 향후 모든 계약에서 영구 배제하는 ‘윌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시민들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솔직한 답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존의 일방적 설명 중심의 설명회와는 달리, 시민이 질문하고 시장이 직접 답하는 형식으로 소통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시장을 위해 현장에서 주신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시민과 함께 위대한 도시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25일 임실군의회에서 전북주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293차 월례회가 열린 가운데, 회장인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내 시군의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 시군의장들 “기초의회 중장기 교육과정 신설을”

월례회 열고 현안 논의...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등 4건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25일 임실군의회에서 제293차 월례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장이 제안한 ‘기초의회 중장기 교육과정 신설 촉구 건의안’과 진안군의회 동창욱 의장이 제안한 ‘용담호 하천관리지구 변경 건의안’,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을 비롯한 4개 시의회의장이 공동 제안한 ‘전북특별자치도민 권리 보장을 위한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정읍·남원 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이 제안한 ‘육상 비가림시설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기초의회 중장기 교육과정 신설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현재 기초의회 사무관급 교육은 단기 과정에 머물러 정책·입법·예산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기초의회 공무원 전용 중장기 교육과정 신설 및 교육정원 확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 교육 기회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

도적 장치 도입 등을 촉구했다. 또 ‘용담호 하천관리지구 변경 건의안’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보전지구 및 일반보전지구 지정으로 주민 친수 공간과 관광자원 활용에 제약이 많다”며 “일부 구역을 친수지대로 변경해 생활 복지와 관광 기반을 동시에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민 권리 보장을 위한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정읍·남원 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서는 “전북은 가정법원이 없어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적 관리에서 배제되는 현실이다”며 “가사·소년 사건 증가에 대응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전주가정법원과 군산·정읍·남원 지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육상 비가림시설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서는 “노후 주택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한 비가림시설이 현행법상 불법 건축물로 규정돼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생활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제도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2025년 제3~5회 청소년 모의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주최한 청소년 모의의회가 25일 전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번 모의의회는 전주양현초등학교 6학년 학생 약 150명으로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 다. 참여 학생들은 의장, 의사담당관, 의원 등 다양한 역할을 분담하여 실제 의회의 진행 방식에 따라 회의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개최 선언을 시작으로 안건 보고, 자유발언, 찬반 토론, 최종 표결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진지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국주영은(전주 12) 의원은 행사에 참석해 “오늘이 저리가 단순한 체험을 넘어, 민주주의는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직접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학생들의 도전과 참여를 응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의회 청소년 모의의회는 형식적인 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보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체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